

보도설명자료 (15.1.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원유 비쌀 때 사고 쌀때는 미적, 딜레마 빠진
'전략비축유 정책' (15.1.26. 서울경제)

1. 기사내용

□ 중국은 비축유를 늘리고 있으나,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비축 기지의 36%가 비어있음에도 정부는 추가 비축에 난색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① '중국은 비축유 확대중이나 우리는 소극적' 내용 관련

- 비축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은 비축유를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IEA(국제에너지기구) 회원국 중 4위 규모의 비축유를 확보 중

* 中 정부비축규모는 순수입량기준 약 30일분으로, IEA 권고기준(90일)의 1/3에 불과
< 주요국 비축현황 (IEA, '15년 기준) >

국가명 (순위)	미국 (1)	일본 (2)	독일 (3)	한국 (4)
비축량	2002.1백만B	589.6백만B	283.2백만B	205.9백만B
비축일수	333일(132)	172일(97)	145일(108)	296일(138)

* 정부 비축과 민간비축을 합산한 규모 (괄호안은 정부비축만 고려시 비축일수)

- 미국·일본 등 주요국도 저유가 요인 외에 정책적 필요성 및 기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규모 유지·조정 중

* (미국) 약 6.95억B의 정부 비축유를 보유중이나, 자국 내 셰일 오일 증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비축규모 감축(판매) 예정 (비축유 매각을 통해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관련 재정을 확충하는 교통법 개정안 통과, '15.12)

* (일본) 비축 규모에는 큰 변동 없이 '중질유→경질유 중심'의 유종교체 추진중

② '비축기지의 36%가 비었다'는 내용 관련

- 전체 비축시설(133.2백만B)은 정부비축(92.6백만B, 70%)과 국제공동비축 등 상업적 활용(33.3백만B, 25%)을 통해 95% 활용 중

- 이는 적정한 정부 비축량을 유지하면서, 여유 공간을 해외기업에 대여해 간접비축효과와 함께 비축유 구입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함

* 비축시설 상업활용 수익은 비축유 구입 등 정부비축 재원으로 재투입(석대법 시행규칙)

* 국제공동비축 계약 물량은 '우선구매권' 통해 비상시 국내도입 가능

시설 총량	146.0 백만B (전국 9개 비축기지)			
가용 공간	133.2 백만B (100%)			12.8백만B
사용 현황	정부비축	상업적 활용		여유 공간
	92.6 백만B (70%)	33.3 백만B (25%)		7.3 백만B (5%)
		국제공동비축	석유공사 Trading	
		26.6 백만B	5.9 백만B	
* 울산비축 기지 지하화 공사 중				

③ '정부의 비축유 신규 확보는 축소 추세' 내용 관련

- 현재 정부는 비축목표('25년까지 1억7백만B) 달성을 위해 매년 일정한 절차(연간 목표량을 평균가격으로 구입)에 따라 비축유 확보 중

* 종전에는 유가에 탄력대응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저점을 판단해 구입시점·물량을 결정하였으나, 유가의 불확실성 및 저점 포착에 따른 구입 지연에 대한 국회 지적을 수용해 '09년 이후 현시스템으로 개선·유지 중

- 다만, 올해의 경우 '15년부터 이어진 저유가 기회요인 활용을 위해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 ('15년: 549억원 → '16년:900억원)

④ '유가 흐름을 반영한 탄력대응 필요' 내용 관련

- 정부 석유비축은 원유·제품 수급에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정책으로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임
- 따라서 단기간 유가 등락에 따른 큰 폭의 조정이나 차익 매매 등 경제적 운용보다는 매년 안정적으로 비축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문상민 서기관(044-203-5224)